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전략적 리스크와 핵 비확산 정책의 영향

한국의 관점

이상현

2023.02

저자 소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이상현은 APLN의 멤버이자 세종연구소 소장입니다. 한국행정정책학회(KNPS)의 회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1999년에 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샘페인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1987-88)와 한국국방연구원(1988-90)의 연구원이었고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외교통상부(MOFA)의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국제정치와 안보, 한미 관계, 남북 관계, 핵 안보 및 핵 비확산, 동아시아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총괄 요약

한국의 즉각적인 안보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2022년 초부터 단거리 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에 이르는 약 70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리스크에 대한 관점

- 국제 정세의 체계적 분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를 2차 냉전시대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 지역적으로는 중국이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국가 안보 정책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확장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 한반도의 전략적인 상황은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 중단, 남북 대화 중단, 코로나 대유행 발발 이후 북한의 자발적 고립 때문에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국의 주요 국가 안보 문제

- 한국의 즉각적인 안보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2022년 초부터 단거리 미사일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에 이르는 약 70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7차 핵실험을 위해 일부 철거된 풍계리 핵실험장 부지에 새 건물을 세워 해당 부지의 일부라도 복구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 간의 정책 변화 및 유지

-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확고히 하려 노력하면서, 이전의 보수 정권의 뜻을 이어받아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켜 남북 관계 개선의 근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태도

-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에게 실질적 위협이라고 고 생각하며 미국 핵무기의 배치보다 독립적인 한국의 핵무기 생산 능력의 개발을 일관되게 지지합니다.
- 하지만 어느 쪽의 선택지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미국의 확장된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체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

- 윤석열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핵 확산 금지 조약 규범을 준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관한 입장은 최근 몇 달간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뚜렷해지고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 한다면, 그것은 아시아에서 핵도미노 효과가 시작됨을 시사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리스크에 대한 관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주로 외교 정책, 안보, 군대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리스크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세계 강대국들 간의 경쟁 심화, 악화되어 가는 국제 지배 구조, 국제 공급망의 지장, 그리고 파괴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세계적 제도와 규범이 약화됨에 따라 국제 정세의 체계적 분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분열이 지속된다면 한국과 같이 강대국이 아닌 국가나 통상 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를 2차 냉전시대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미국·유럽 대 중국·러시아라는 자유 민주주의와 권위 주의 국가 간의 대립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것인지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주로 외교 정책, 안보, 군사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매우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적으로는 중국이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중국 내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해외 여행 제한을 해제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의 PCR 검사 양성자 수도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이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대처로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은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한국인과 일본인 여행객들의 트랜짓 비자 면제도 중단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2016년에 한국 정부가 탄도 미사일 방어 부대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했을 때 중국이 한국의 기업들에 보복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중국이 외교적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은 거대한 미국과 같은 국가보다 한국처럼 작은 국가에 보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과 가치주의 외교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한국을 향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국가 안보 정책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확장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2022년 12월 16일에 기시다 행정부는 국가 안보 전략(NSS), 국방 전략(NDS), 중기 방위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전략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3년에 NSS가 처음 발표된 이후의 첫 주요 개정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변화는 적의 군사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의 확보와 일본의 국방 예산을 GDP의 2% 정도까지 두배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공격적인 작전을 배제시킨 일본의 '자위 전략' 원칙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의 전략적인 상황은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 중단, 남북 대화 중단, 코로나 대유행 발발 이후 북한의 자발적 고립이라는 세 가지 압박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편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 영토 및 해상 주권 문제, 지정학적 요인, 지리적인 이유들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중국이 강제적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국가 안보 문제

일부 철거된 풍계리 핵실험장 부지에 새 건물을 세워 7차 핵실험을 위해 해당 부지의 일부라도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즉각적인 안보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2022년 초부터 단거리 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에 이르는 약 70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중거리, 단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철거된 풍계리 핵실험장 부지에 새 건물을 세워, 7차 핵실험을 위해 해당 부지의 일부라도 복구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북한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의 북방 한계선(NLL) 남쪽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NLL 북쪽 해역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2022년 초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 재개를 비난하며, 이는 북한의 침공 시나리오를 시험해 보기위한 마지막 단계이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거라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판해 왔지만, 최근의 반응은 더 강경하고 공격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4월에 있었던 연합지휘소훈련(CCPT)과 8월에 있었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그리고 핵추진 항공 모함인 USS 로널드 레이건호와 비질런트 스톰이 참여한 해군 합동군사훈련, 공군 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멤버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천은 북한이 공군 합동군사훈련에 "특별한 무력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고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말했습니다.¹ 그 다음날 북한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하였고 뒤이어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의도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관통하고 비핵 및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사일 유형을 빠르게 다양화해 그들의 생존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전술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사일은 화학적, 생물학적 적재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재래식 비대칭 무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의도는 두가지로 보입니다. 첫번째는 정치적인 의도 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그의 집권 10년 의 경제적 실패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에서의 그의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의 위기 속에서 북한은 국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도 북한의 전략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의도 는 군사적 필요성입니다. 북한은 2017년에 핵무기 개발 완료를 선언했지만,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제 능력에 제한 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개발 은 최소한의 핵 억제 능력의 향상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 축소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물질(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중수소, 삼중 수소) 생산 확대 및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크고 전략적인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간의 주요 정책 변화와 유지

윤 대통령은 이전의 보수 정권의 뜻을 이어받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관계 개선의 근간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경제적 공존의 선순환을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 경제를 수립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1998-2003 년의 김대중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접근 방식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반도 평화 체제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을 완료 시키기 위해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외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 년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거의 붕괴된 상태 입니다.무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의 북한과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지만 남북 대화를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 윤 대통령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확고히 하려 노력하면서 이전의 보수 정권의 뜻을 이어받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관계 개선의 근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연계를 깊게 다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및 전세계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윤석열과 바이든의 정상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임을 강조하며,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파트너십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선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우크라이나, 기후 변화, 코로나-19, 사이버 공간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를 포함한 핵심 동맹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지가 북한과의 앞으로의 모든 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강조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최고 우선 순위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2022 년 8 월 15 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것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은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 조치를 처음부터 추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어떤 것보다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주요 대책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마련 되기 전에 한반도 R-FEP(자원식량 프로그램)를 추진하고, 북한의 공공 기반 시설, 민생, 경제 발전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먼저 진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의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외부로부터 공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보상 중심 적인 제안 만으로는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데리고 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종료를 통해 체제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북한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보다 국가의 생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미국의 적대적 정책(정치, 군사, 경제)의 종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와 개방의 다섯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국가의 생존 문제와는 다른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제 생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우리 국가의 핵심을 '경제 협력'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은 정말 순진하고 유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² 북한 체제의 안전은 한국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으며 국가의 생존 문제는 미국과 협상할 문제라 주장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북한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대담한 구상에서 부족한 것은 북한의 초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만약 북한이 대응 하지 않는다면 대담 한 구상은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의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을 목격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전술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과 탄약과 같은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재건 사업에 병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위기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접한 관계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 조사는 한국인들이 독자
적인 한국의 핵무기 생산 능력
개발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일종의 절대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은 핵무기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핵위협이 뚜렷해진 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독립적인 한국의 핵무기 생산 능력 개발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⁴

북한의 핵 위협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한국인들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이 국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반면, 일부 국민들은 한국내 의 미국 핵무기 배치를 지지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중은 압도적으로 미국 핵무기의 배치보다 독자적인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선호, 56%가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71%는 한국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를 표명했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중은 압도적으로 미군 배치(9%)보다 독자 적인 핵무기 보유 (67%)를 선호하였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대다수 는, 중국 의 압력, 국제 경제제재, 미군 철수와 같은 잠재적인 결과에 의해 지지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았습니다. ⁵

현재로서는 이러한 선택지 중 어느 하나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NPT 에서 탈퇴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제적 제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는 미국의 핵 확산 금지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한국 영토 안에 배치하는 것은, 보관 및 관리 비용과 위험성 뿐만 아니라,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만일의 경우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이 최종적으로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체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2 년에 워싱턴에서 열린 제 54 차 한미국방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핵, 비핵, 미사일 방어, 선진적인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비전략적 핵무기(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인하 지 않을 것이고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개요로 하는 연례 DSC 탁상 훈련을 실시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⁶

한국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체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확장된 억제력과 함께,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3축 체계는 신속히 완성되어야 합니다. 3축 체계는 윤 대통령 정부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대응의 중요한 부분으로, 북한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한 킬체인(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 및 추적하여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북한을 처벌하기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 전국민이 단결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구체 적인 핵 공유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대의 순환 배치, 전략적 자산의 정기적 운용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이 핵무기 사용의 임계치를 낮춰 한반도의 위기 관리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양국은 핵 억제와 위기 관리에 동시에 주력해야 합니다.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영향

최근의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 대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반세기 이상 유지되었던 NPT 시스템의 실질적인 종말을 의미할 것 입니다. 러시아는 NPT 조약 하에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NPT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최초의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이후 유지되어 온 핵 금지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은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신뢰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 문제는 더욱 시급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정책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 14기 최고인민회의의 제 7차 회의에서 북한은 그간의 '자위용 핵무기 보유 특별법'을 폐지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선언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정은은 북한은 국가의 핵무기 정책에 관한 한 투명성과 합법 성을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핵 선제공격을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에 핵이나 다른 무기로 대량 살상 공격이 실행되었거나 임박했을 때, 지도부나 국가 핵 무력 지휘부에 핵 공격이나 비핵 공격이 실행되었거나 임박했을 때,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대상에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실행되었거나 임박했을 때, 전쟁 확대를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작전상 피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제안한 핵무기 사용 조건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임의적입니다. 이것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임계치를 낮춥니다.

2022년 12월 말에 제 8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고, 상세한 결과는 관영신문인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계속되는 핵전력 강화와 2023년의 핵무력 및 방어 능력 구축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핵무기 제정법에 대한 검토는 핵 군비 구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 되었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대량 생산, 핵 무기 보유국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다른 ICBM 개발 계획의 채택, 선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은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적 문제들에 대해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두
렷해지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의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핵도미노 효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한국을 '확실한 적'으로 규정하였고 올해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기존의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이란 입장 하에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대북 억제력과 함께 위기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악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핵 확산 금지 조약 규범을 준수할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핵의 평화적 이용 확장이 핵무장보다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 금지 정책을 굳건히 유지해 온 한국은, 세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 확산 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최근 몇 달간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에 더해, 2022 년 말에 북한의 드론 몇 대가 서울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며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후로 윤석열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도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군 당국에게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⁷ 윤석열 대통령은 2023 년 1 월 11 일의 외무부와 국방부의 정책 브리핑 마지막에 "한국은 전술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재배치할 수 있거나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분간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 NPT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핵무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줄어들 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두 렷해지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의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아시아에서 핵도미노 효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⁸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만 합니다.

참고 문헌

1 So-yoon Park, "Further statement by Park Jong Chon... extending Korea-U.S. military drill is a huge mistake," *Yonhap News*, 3 November 2022,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3158451504?input=1195m>

2 Deok-ho Son, Kim Yo Jung's criticism: 'that person is reprehensible' (김여정, "윤아무개"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비난담화), *Chosun Ilbo*, 19 August 2022,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19/5JL4BSZEZFAVVNQF6BXZ4LTWEY/>.

3 A senior Russian diplomatic official said he was grateful to North Korea for supporting the Ukraine war. In the meantime, the United States has claimed that North Korea has been selling weapons such as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to Russia. *TV Chosun News*, 4 January 2023,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04/2023010490022.html

4 See, for example, Public Survey on "Sou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n North Korea," Asan Policy Institute, released 12 November 2020 <https://www.asaninst.org/contents/아산정책연구원-한국인의-대북-인식-여론조사-결과>; see, also, "76% of the Koreans say Korea should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CHEY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and Gallup Korea joint poll survey, *Chosun Ilbo*, 31 January 2023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1/31/JJ7JGRENHZGK7K6R6FRNLFAZTM/>

5 Toby Dalton, Karl Friedhoff, and Lami Kim, "Thinking Nuclear: South Korean Attitudes on Nuclear Weapons,"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February 2022 <https://globalaffairs.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thinking-nuclear-south-korean-attitudes-nuclear-weapons>.

6 최근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연합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KIDD), 확장 억제 협의체(EDSCG) 억제 전략 위원회(DSC)과 같은 양자 간 메커니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제 전략 위원회 내에서는 양측이 북한의 변화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고 있습니다.

7 "Why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getting its own nukes", *The Economist*, 19 January 2023, <https://www.economist.com/asia/2023/01/19/why-south-korea-is-talking-about-getting-its-own-nukes>.

8 Chung-in Moon, "Is Nuclear Domino in Asia Real and Inevitable?"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1 October 2021, <https://apl.network/projects/wmd-project/is-nuclear-domino-in-northeast-asia-real-and-inevitable>.



EUROPEAN
LEADERSHIP
NETWORK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